

통합교섭단체 구성 세불리기

■ 범여권 정계개편 움직임 활발

외부인사 수혈... 늦어도 내달 초 출범기로



7일 우리은행 노조원들이 우리금융 회장에 내정된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은행 본점 이사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낙하산’ 절정

전직 차관 출신들 공기업 CEO 싸움이

“부처와 밀착 우려” 노조측 반발 거세

참여정부 마지막 대규모 정부 관련 기업의 인사가 경제관료들의 ‘한관승’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한동안 ‘특정부처 출신의 관련기업 즉시 취업은 안된다’던 원칙이 무색하게 외관상 공모절차를 밟았던 공기업 인사에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합 있는 경제부처 출신 전직 관료들이 모두 취업이나 연임에 성공했다.

▷직전 차관 3명 모두 CEO 임명=황영기 우리금융 회장의 후임자를 물색하던 회장추천위원회는 지난 6일 예상대로 박병원 전 재무제1차관을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박 차관이 회장직을 맡으리라는 것은 이미 그가 사표를 냈을 무렵부터 기정사실화됐었다.

▷박 회장 내정자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김종갑 전 산자부 1차관이 하이닉스반도체의 대주주인 채권단에 의해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추천됐고 이어 7일에는 이원길 산자부 2차관이 국내 2위의 기업집단 총수인 한 국전력의 차기 사장 후보로 내정됐다.

▷이들 외에도 지난달 22일에는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지내다 사표를 낸 유재한씨가 주택금융공사 사장에 내정됐고, 역시 ‘모피아’(재경부 관료 출신) 출신

인 강권석 기업은행장은 7일 금융계 출신의 유력한 경쟁자를 제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너무하다’ VS ‘유능한 적임자’=고위 관료들의 연임은 ‘100% 취업성공기’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따가운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퇴직 직후 직무 관련 분야의 취업에 불허하는 윤리규정상 이들의 CEO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가 이들 관료의 취업에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거나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 재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관정을 내렸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모두 불과 1~2개월전까지 새 CEO 후보들이 근무하던 부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노조 측의 반발도 만만찮다. 당장 박병원 회장의 취임에 앞둔 우리금융에서 우리은행 노조가 파업에 나설 태세이며, 발전노조 역시 발전 민영화나 배전 분할 등에 대한 과거 정책을 문제삼아 이원길 사장 내정자의 공모 지원 당시부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 부처나 당사자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런 비판에 대해 “억울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우선 몸이 담은 곳은 탈당하지 한 달이 넘어서는 데도 별다른 여론의 지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이다. 탈당 이후 압중 모색을 접고 그동안 선연적 수준에 머물러온 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시도와 모색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탈당 그룹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우선 통합신당 창당 이전 단계인 통합교섭단체 구성이다.

우선 통합신당모임과 민생정치모임이 우선 통합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15일 이후 열린우리당에서 추가 탈당하는 의원들을 끌어모아 이에 합류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는 4·3일 전당대회를 전후해 민주당이 당적을 유지한 채 통합교섭단체에 참여하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 외부인사 수혈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까지 늦어도 내달 초에는 통합신당 창당의 전 단계인 통합교섭

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이들 반영하듯 지난 주말 통합신당모임 일부 의원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접촉, 4·25 재보선 및 대선 출마 등을 놓고 깊은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일 통합신당모임의 최용규, 염동연, 강봉균 의원과 민생정치모임의 전경배, 정성호, 우윤근 의원은 만찬 회동을 갖고 교섭단체 구성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여기에 7일에는 탈당 그룹들을 중심으로 중도개혁통합 신당 대토론회를 갖고 통합신당 창당 군불 때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통합신당모임 소속 이강래 의원

은 “신당을 창당하려면 통합교섭단체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는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탈당 그룹의 움직임과 관련, 민생정치 모임의 우윤근 의원은 7일 “지난 6일 만찬회동에서 탈당 그룹이 교섭단체를 함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며 “다만 민주당이 오는 4월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통합교섭단체 구성의 정확한 일시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탈당과 그룹들이 통합교섭단체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열린우리당이 통합신당 창당의 기선을 잡지 않거나 경우, 탈당 그룹으로는 속도 밟도 안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그룹의 러브콜에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 잔류파의 탈당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이후 통합교섭단체 구성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범여권 영입대상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그러나 통합교섭단체가 성공적으로 꾸러진다면 정 전 총장의 합류 등 여연 확대도 동시에 이뤄지면서 범여권을 망라한 대통령 후보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남권특별법 제정 ‘제동’

국회 건교위, 동일 성격 법안 동시 심의로 차질 우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지역개발을 이유로 전국 지자체가 개발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본보 6일자 1면) 전남 서남권 발전을 위한 ‘서남권 등 투자촉진 특별법’(서남권특별법)이 비슷한 성격의 법안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어서 차질이 예상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의 물류확대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가 서남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슷한 법안의 난립으로 법 제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정연수위원회 법안심사소

위는 지난 6일 전남·경남도·부산시가 공동 제출한 ‘남해안발전특별법’과 경북·강원지역에서 제안한 ‘동해안 광역권개발지원 특별법’을 ‘남·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남동해안특별법)으로 묶어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건교위는 서로 다른 남동해안 특별법이 규제철폐와 기반시설 확충 등 내용이 유사하고 범위가 커지는 바람에 특별법의 의미가 떨어지므로 일반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건교위는 현재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서남권특별법안이 3월 말까지 제출되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남동해안특별법과 함께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서남권특별법이 남동해안특별법과 섞여 논의될 경우 특별법 지위 상실과 함께 시기도 크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상반기 제정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서남권특별법안을 3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조문 조안 작성 등 현재 진행단계로는 무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데다 남동해안특별법안에 물혀 흐지부지될 공산도 커지고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 한미FTA 제8차협상을 앞두고 7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가 보좌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중외문화벨트 부지 매입 대책 있나”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광주시의회는 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중외문화예술벨트 조성을 위한 전남도교육청 부지 매입 방안 부재와 주먹구구식 수완지구 신설학교 설립계획 등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조호권 의원은 “광주시와 문

광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외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이 예정부지 매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유재신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 수완지구 내 신설학교

설립 계획을 기존 초등학교 9개, 중등학교 5개에서 초등학교 6개, 중등학교 3개로 축소, 과밀학급이 야기될 것”이라며 “분양 이후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한다면 재원의 추가 부담과 더불어 교육 수요자가 몇 배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보안을 요구했다. /박치경기자 jkpark@kwangju.co.kr